

## 유엔기후변화협약내 CCS 기술의 CDM화 사안과 한국의 대처 방안

이병진<sup>1</sup>, 이종협<sup>1,2,\*</sup>, 김종현<sup>1</sup>, 강병옥<sup>1</sup>, 이경아<sup>1</sup>

<sup>1</sup>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; <sup>2</sup>서울대학교

(grnyi@nrf.go.kr\*)

작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가별 탄소배출저감 감축의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. 그러나 1992년 리우선언 당시 채택된 원칙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‘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·기술적 지원과 역량 구축’이라는 원칙에 재합의한 것은 성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여러 회의 안건 중, 크게 이슈가 된 안건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(CCS : Carbon Capture & Storage) 기술의 청정개발체제(CDM 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화에 대한 사안이다. 이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은 탄소시장, 환경, 안정성면에서 CDM화 찬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.

호주의 국제탄소포집저장연구소(Global Carbon Capture & Storage Institute)는 CCS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구로서, CCS 기술의 CDM화 사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. 훗날, CCS 기술의 CDM화는 탄소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하여, CCS 기술의 실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소개되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CCS 기술의 CDM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항 그리고 CCS 기술 실증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.